

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 됩니다!

 <p>미래창조과학부</p>  <p>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</p>	<h1>해 명 자 료</h1>	<p><a href="http://www.msip.go.kr">http://www.msip.go.kr</a></p> <p><a href="http://www.kcc.go.kr">http://www.kcc.go.kr</a></p>
<p><b>2013. 12. 30(월) 배포시점</b>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
<p>문의 :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(02-2110-1930), 이정순 사무관(02-2110-1933)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전영만 과장(02-2110-1510), 황지은 사무관(1516)</p>		

## '쫓그라든 이통시장...대통령 한마디에 규제경쟁' 제하의 보도와 관련,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- 언론사명 : 디지털타임즈(경제종합 1면, 3면)
- 보도일 : 2013. 12. 30.(월)
- 보도요지
  - 박대통령이 지난 3월 보조금 차별지급이 문제라며 해결을 지시하자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며,
    - 이는 시장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깨뜨리고 있으며 제조사, 이통사,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現 시장구도를 '형평성'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
  - 단말기 유통법이 처리될 경우 시장위축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
    - 특히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해외 이통사들 역시 똑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수출타격이 예상됨
    - 이통사간 정상적인 마케팅경쟁까지 위축시켜 SKT, KT, LGU+의 5:3:2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임

□ 해명내용

① 지난 3월 대통령이 보조금 차별지급이 문제라며 해결을 지시하자 정부에서 단말기 유통법 카드를 꺼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

○ 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」은 지난 **2012년도** 국정감사에서 “갤럭시S3 17만원 사태”와 같은 과도한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,

- 당시 방통위의 통신정책국과 이용자보호국이 전문가와 함께 ‘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TF’를 구성(12.11월~)하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입니다. 따라서, 금년 3월 대통령의 지시로 단말기 유통법 카드를 꺼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② 단말기 유통법이 제조사, 이통사,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現 시장 구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

○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\*(11.28), 한국YMCA(11.28), 알뜰통신사업자협회(10.16), 이동통신유통협회(11.7)에서 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」 제정을 지지 또는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으며,

\* 한국소비자연맹, 소비자시민모임, 녹색소비자연대, 한국YWCA연합회, 대한주부클럽연합회, 전국주부교실중앙회, 한국YMCA전국연맹, 한국소비생활연구원, 한국부인회, 한국소비자연구원

- 지난 12.5일 개최된 ‘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’에서도 소비자 단체, 이통3사, 제조사, 알뜰폰협회, 유통협회는 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의 극심한 차별(200~300%), 고가 단말기(90~100만원) 위주의 독과점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단말기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.

※ 다만, 삼성전자에서만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이견을 제시

○ 따라서 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」이 제조사, 이통사,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있는 現 시장구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③ 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」이 처리되면 시장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

○ 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」은 보조금 “금지법”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“보조금 투명지급법”이므로,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

- 동 법안은 보조금으로 인한 과도한 시장교란(예: 보조금 롤러코스팅(5만원~80만원))을 방지하여 보조금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차별에 따른 소비자간 후생배분 왜곡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(67.6%)과 LTE 전환율(51%)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

※ '12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67.6%로 세계 1위(출처: SA)

※ 우리나라의 4G 보급율은 51%('13년 4분기 기준)로 주요 10개국 중 1위(출처: GSMA)

④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해외 이통사들 역시 똑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수출타격이 예상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

○ 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」에는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어 수출에 타격을 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국내 제조사가 해외에서와는 달리 ‘적극적인 유통자의 지위’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며, 이와 관련하여 유통 현황에 대한 ‘조사’ 목적으로 최소한의 자료(장려금 규모 등)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지 대외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.

- 또한 삼성전자측과도 제조사의 자료제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외 공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대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.

⑤ **SKT, KT, LGU+**의 **5:3:2**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

- ‘보조금 공시’, ‘보조금 부당차별 금지’, ‘보조금을 미끼로 한 고가 요금제 사용 강제 제한’ 등 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」이 시행되면, 보조금 착시를 통한 시장교란 없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“요금제에 있어 가격경쟁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

- 이통3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(이통사보다 20~30% 요금이 저렴)와의 요금경쟁이 촉발됨으로써 시장 경쟁구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.

- 후발 제조사의 경우도,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단말기 가격차별을 통한 마케팅이 작동하여 특정업체 쏠림현상이 완화되는 등 공정한 경쟁의 틀이 마련될 수 있어 후발제조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   끝.